



서울 행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0435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홍○○
피 고 1. ○○특별시 ○○구청장
2. ○○특별시 ○○구청장
3. ○○시장
변 론 종 결 2025. 7. 16.
판 결 선 고 2025. 9. 10.

주 문

1. 피고 ○○특별시 ○○구청장이 2023. 12. 4. 원고에게 한 취득세 29,551,7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488,3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특별시 ○○구청장이 2023. 12. 14. 원고에게 한 취득세 18,099,8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37,1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시장이 2023. 8.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535,9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5,3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바코드스캐너 및 프린터, 라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1. 2. 2. 설립된 회사로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주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01. 12. 31. 기준	2002. 12. 31. 기준 (2020. 12. 31.까지 동일)	2021. 12. 31. 기준
C(지분율 30%)	원고(지분율 50%)	원고(지분율 100%)
D(지분율 25%)	G(지분율 25%)	
E(지분율 25%)	H(지분율 25%)	
F(지분율 20%)		

나. 피고들은 원고가 2021. 12. 23. G, H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지분율 100%)가 되었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2023. 8. 10.부터 2023. 12. 14.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간주취득세 합계 48,187,4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과 농어촌특별세 합계 4,070,8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청 (과세대상 물건)	처분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피고 ○○시장 (I 회원권)	2023. 8. 10.	535,930원	45,360원
피고 ○○특별시 ○○구청장 (J 부동산)	2023. 12. 4.	29,551,700원	2,488,360원
피고 ○○특별시 ○○구청장 (K 부동산)	2023. 12. 14.	18,099,840원	1,537,140원
합계		48,187,470원	4,070,86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괄호 생략)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후단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F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 실질적으로 1인 주주(지분율 100%)에 해당하였고, C, D, E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 3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명의를 대여해 준 자에 불과하다.

2) 원고는 2002. 10. 30.경 F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지분율 100%)를 3,000만 원에 취득하면서 그 일부(지분율 각 25%)를 고향 친구인 G, H에게 명의신탁해두었다가, 2021. 12. 3.경 각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서 2021. 12. 23.경 원고 이름으로 각 명의개서를 마쳤을 뿐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주식의 취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 중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



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2, 4 내지 11,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G, H는 원고가 2002. 10. 30.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지분을 100%)가 되는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자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이름으로 각 명의개서를 마친 2021. 12. 23.경 전후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소유 비율은 100%로 동일하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종전 주주였던 F는 '당시 주주명부에는 자신 이외에도 C, D, E이 주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은 자신의 배우자이고, D, E은 자신의 친구이며, 자신이 실질적으로 1인 주주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 이 사건 회사는 2001. 2. 2. 설립되었는데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발기인 3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회사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가 3인 이상일 필요가 있었던 점, ㉡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에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주주명부상 지분율(특수관계자, 즉 배우자의 지분 포함)을 50% 이하로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㉞ F, C, D, E은 모두 1954년생으로 이 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가(그중 C이 대표이사였다) 2002. 10. 30. 각자의 지분 전부를 양도함과 동시에 이 사 또는 감사직에서 모두 사임하였던 점, ㉞ 원고는 F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1억 원을 반환받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전부를 3,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가지급금 변제 재원을 마련하고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양도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1억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2002. 11. 1.부터 2002. 11. 6.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원고 이름으로 1억 2,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F의 것으로 보이는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7,328,600원(= 81,415,500원 + 49,539,600원 + 16,373,500원, 원고는 1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퇴직금 등 급여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이 이체되었던 내역이 확인되는 점, ㉞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01. 2. 2.부터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L, M 또한 F가 이 사건 회사의 종전 실질적 운영자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수증할 수 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종전 1인 실질주주였던 F는 '자신이 2002년경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 H는 '친구인 원고가 2002년 하순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가 원고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좋지 않으니 일부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부탁하여 들어 주었다. G이 2002. 10. 30.경 D 이름으로 되어 있던 주식 전부에 관하여 명의개



서를 마쳤고, H가 같은 날 E 이름으로 되어 있던 주식 전부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다. 이 사건 회사는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모두 반환하였다. 원고가 2021. 10.경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를 회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각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각 명의개서를 마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2021. 12. 3. 원고와 G, H 사이에 각 명의신탁해지약정서가 작성된 바 있다.

F, G, H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역시 ㉠ 원고로서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주주명부상 지분율을 50% 이하로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G이 2002. 10. 30.부터 2014. 3. 26.까지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H가 2002. 10. 30.부터 2008. 3. 26.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G, H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L, M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계속하여 원고이었고, 원고 이외에 다른 주주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2014년에 지급된 배당금 중 G의 몫에 해당하는 21,150,000원은 2014. 6. 23.경 주택 자금이 필요한 직원 N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15. 6. 29.경 N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000,000원(원고는 그 차액인 115만 원에 관하여 현금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이 이체되었고, H의 몫에 해당하는 21,150,000원은 2014. 6. 23.경 H의 계좌로 입금된 즉시 G와 H의 예상납부세액을 제외한 19,150,000원이 원고의 처제인 O의 계좌로 출금되었던 점, ㉣ 2015년에 지급된 배당금 중 G의 몫에 해당하는 42,300,000원은 2015. 8. 25.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H의 몫에 해당하는 42,300,000원은 2015. 8. 25. H의 계좌로



입금된 즉시 예상납부세액을 제외한 40,300,000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점, ㉔ 원고가 2021. 12. 23.경 G, H 이름으로 되어 있던 주식 전부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시점을 전후하여 G, H가 원고로부터 주식 이전의 대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수증할 수 있다.

③ 원고가 F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2002. 10. 30.경은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01. 2. 2.로부터 1년 4개월 이후인 점,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의 양도대금이 3,0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최초로 과점주주(지분율 100%)가 된 2002. 10. 30.경 이 사건 회사가 부동산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처분에서 문제되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모두 원고가 최초로 과점주주(지분율 100%)가 된 2002. 10. 30.경 이후에 취득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최초로 과점주주(지분율 100%)가 된 2002. 10. 30.경 무렵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G, H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따라서 원고가 2021. 12. 23.경 최초로 과점주주(지분율 100%)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05

판사 송○○

판사 김○○